

전국 행정학 전문가 '정부 조직개편안' 설문

통일부 폐지 'NO'... 정통·여성부 폐지 'YES'

“조직 개편 매우 잘하고 있다” 6% 뿐 국민적 공감대 못얻어... 수정·보완해야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전국의 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조직개편안을 통해 지향하려는 미래의 국가 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이견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평가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적 평가가 13.7%에 이르는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는 강한 긍정적 평가는 겨우 5.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조직개편안이 국민적 합의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교수가 7.9%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 조직개편안의 많은 부분이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부처를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서 통일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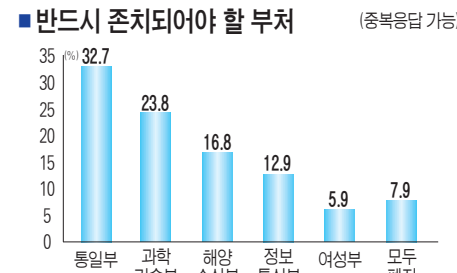
를 선택한 응답자가 각각 32.7%와 23.8%, 16.8%씩을 차지한 것은, 이들 부처의 존치 의미와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응답자들은 정보통신부와 여성부에 대해서는 12.9%와 5.9%만이 '존치해야 한다'고 답변, 이들 두 부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중치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위원회 축소, 통·폐합정책에 대해서는 72.5%가 '매우 또는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매우 잘하고 있다'는 강한 긍정적 답변이 17.6%를 차지, 새 정부의 관련 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 가운데 낙후 지역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축소에 대해서는 70.6%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이 같은 차원에서 폐지가 예정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5%가 존치를 촉구했다. 또 광주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시아문화중

심도시조성위원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5.1%가 존치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또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49%가 부정적으로, 그리고 41.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시각에 대해서는 56.8%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41.2%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25~26일 조선대에서 열린 가운데 학술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행정학자들은 '새 정부 개혁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외계층 보살피는 사회 통합 국가 재정 기능으로 수행해야”

장병원 장관 행정학회 축사



장병원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5일 조선대에서 열린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지만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은 국가 재정기능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성장률 둔화, 사회계층간 양극화 심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인구 고령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 양극화 확대, 세계화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재정당국은 이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 복지 인프라를 정비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등 시대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그 성과를 실현하려는 조금의 때문에 정책방향의 설정과 추진방식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사례를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통해 보았다”면서 “이 학술대회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언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조직 개편 수정 필요”

예산 축소·인력 감축 가능성 낮고 용어 개념도 불분명

행정학과 교수들 지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예산 축소와 인력 감축 등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일부 용어 개념도 불분명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하태수 교수는 지난 25~26일 조선대에서 전국 행정학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간의 삶과 행정의 미래: 새 정부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인수위 주장대로 정부 조직 개편으로 7천여명의 공무원이 감소하고 4천700여명의 예산이 절감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날 “국가모형 변화에 따른 정부규모 변화 탐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예산 축소가 수반되지 않는 조직과 인력 감축은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경제 정책과 행정관리분야에서 절감된 예산이 사회정책 영

역으로 이전돼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공약이나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정부 규모가 확실하게 혹은 일반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의 경제분야의 규제 완화, 교육분야의 지방 및 민간으로의 권한 이양 등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정부 예산 감축이 예상되지만 복지를 비롯, 호남운하와 충청운하 건설 등의 공약에 따라 재정 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오석홍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도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중심의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용어가 기능 분립적, 조직 분열적 구조를 설계하는 전통적 방식을 의미한다면 수정돼야 한다”면서 “일의 흐름을 기준으로 1개 단위의 서비스 또는 사업은 같은 부처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4·9총선 이슈

4 지역주의 싸움이 재현되나

대선보다 '몰표' 더 심해질 듯

신당, 영남 득표율 20% 밀릴 가능성

한나라도 호남서 두자릿수 힘들 듯

올 총선에서도 지역주의에 따른 싸움과 몰표가 재현될까.

정가에서는 우선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영남뿐 아니라 호남에서도 지난 대선보다 지역주의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4년 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영남에서 65석을 얻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4석, 민주노동당은 2석, 국민통합21은 1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차지했다. 한나라당의 싸늘이 속에서 열린우리당의 선전이 돋보였다. 특히 정당별 투표에서 열린우리당은 부산·경남에서 31.7%를 얻는 등 영남에서 선전하면서 지역주의 타파의 가능성을 보이게 했다.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지역 주도권을 다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전체 의석 수 20개 중 19석을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더욱이 정당 득표율도 3%를 넘지 못해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됐다.

17대 대선의 경우에도 영남에서 이명박 당선인으로 표 쏠림이 나타났고, 호남에서는 대통합 민주 신당 정동영 후보 지지자 율동했다는 점에서 지역주의가 상당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 정도는 달랐다. 전체 득표율 48.7%인 이 당선자는 영남권에서 62%를 얻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이 지역 득표율은 70%가량이었다.

정 후보는 광주 79.8%, 전남 78.7%, 전북 81.6%로 자신의 전체 득표율 26.1%보다 훨씬 높은 표를 받았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다 하지만, 90%를 웃돌던 노무현, 김대중 후보보다 낮게 득표했다. 대선 이 당선자의 호남득표율은 광주(8.6%), 전남(9.2%) 전북(9.0%)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못했지만, 2002년 이회창 후보가 광주(3.6%) 전남(4.6%) 전북(6.2%)에서 얻은 것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반면, 정 후보의 영남권 득표율은 2002년 노무현 후보의 29%대 득표율에 못 미치는 6~13%대에 머물렀다.

오는 4월 치러지는 18대 총선에서도 이같이 호남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영남에서 한나라당이 대부분 의석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정도다.

영남의 경우 17대 총선과 달리 신당이 한 석도 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정당득표율도 20%를 밀릴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주의 경향이 더 심해진다는 전망이다. 심할 경우 정당득표율이 17대 대선 득표율보다 떨어지 10%를 넘기 힘들 것이라 예상까지 나온다.

마찬가지로 광주·전남에서 한나라당의 경우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물론 득표율도 지난 대선(8~9%대)보다 낮아지면서 지난해말 대선보다는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년 전 치러진 17대 총선보다는 그 정도가 덜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지역발전 역할을 내세운다면 3%도 안됐던 17대 총선 정당득표율보다는 더 높은 득표율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정형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 세력이 전열을 정비할 경우, 이명박 정권 견제론이 안정론보다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며 “대선에서 희석된 지역구도가 총선 때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프로의 꿈이 활짝!

대한민국 1등 교육 기업, 대교

합계 최고의 수수로 보장

프로입문 합숙기간 2박3일

전국 12,000명 눈높이선생님

국내 최고의 피닉스 220만원

합숙교육기간을 0박 7일에서 2박 3일로 확 줄이고 출판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합리적인 교육일정, 대교니까 다릅니다.”

눈높이선생님을 모십니다

2006.2.13.~2.14.까지 방문접수 시간 10:00~19:00 (착용: 세안제, 마스크, 신발, 장갑)

문의: 1588-1109, 090-222-0909 (무료상담전화)